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초청 프로그램 참석

- 최윤기 선임연구위원(연구조정실)

1. 출장 개요

- 출장지: 일본 동경
- 출장기간: 2013년 2월 17일 ~ 2월 23일
- 출장자: 최윤기(선임연구위원, 연구조정실)
 - ※ KDI, KIEP,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전
문가 동행

2. 출장 목적

- 멕시코 경제학회 총회 주제발표 및 국립대 세미나 발표

3. 출장 주요내용

※ 아래 출장내용은 출장기간 중 면담하였던 일본내 정계, 학계, 산업계의 주요 인사들의 발표 또는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아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으나, 그 주장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배제되어 있음을 밝힘.

(1) 일본 생명보험연구소 방문 면담(Koichi Haji 전무이사 주제발표, 김명준 연구원)

□ 주제발표(제목: 일본 경제) 주요 내용

○ 부동산 버블 붕괴로 촉발된 20년간의 장기 불황에는 이전의 경기호황기의 과잉설비투자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최근의 일본 고령화 문제 및 가계, 기업 저축률 추이를 볼 때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한 경기회복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임.

- 현재 일본의 재정적자가 매우 큰 상황에서 금융완화와 엔저 유도로 경기회복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에 회의적

○ 고령화로 기업과 가계의 저축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무역수지 적자 추세가 향후 경상수지 적자 추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현재의 재정적자가 장기적으로 일본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엔화 전망과 관련하여서는 1달러당 90엔대는 확실하나, 100엔대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는 보지 않음.

- 일본정부는 2% 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나, 본인은 일본 잠재성장율을 1.5% 정도로 추정(인구 0.5%포인트, 기술 1.0%포인트)
- 엔저로 수출증가 및 경기회복을 유도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임.
 - 즉,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외부의 충격에 의해 경기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등 취약
 - 인구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내수에 기반한 완만한 경기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재 설비투자가 일본의 GDP에 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준도 많은 것으로 판단
 - 각종 경제정책도 설비투자 보다는 소비 확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본인의 견해는 일본 경제전문가 사이에서는 소수의견임.

(2)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방문 면담(Jun Ilo 교수 주제발표)

□ 주제발표(제목: 일본 정치) 주요 내용

- 현 아베정권의 성격은 자민당이 대승을 하였으나, 자민당이 잘해서라기 보다 민주당이 못해서 이루어진 결과임.
 - 자민당이 대승하였으나, 지지율은 이전 선거와 비슷
- 민주당의 패배 원인은 정권 운용이 좋지 않았으며, 기피 정당화되었고, 민주당의 자체 분열과 공약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임.

○ 아베총리 선출 배경

-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선거시 3명의 유력인사가 후보에 나섰다. 원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시하라 의원은 당원들의 지지가 낮았고 당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이시바(현 간사장)는 원내에서 지지가 낮았음.
- 원내와 당원들이 투표하는 1차 선거에서 원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이시하라 의원이 3등이 되어 원내에서만 투표하는 결선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1차 선거에서 1위한 이시바와 2위 아베가 결선투표에 참여
- 결선투표에서 원내에서 인기가 없는 이시바 대신 2위 아베가 당선 되어 사실상 어부지리의 당선이 되었음.

○ 아베총리 취임후의 정책 추진 방향

- 총리 선출이후 당초에 비해서는 정책이 다소 중립적 입장으로 전환되었음.
 - 지나친 우익화 견해를 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인사를 내각의 관련이 없는 부처의 대신으로 임명하여 정치적 발언권을 약화
- 아베총리는 당선 이후 원내 주요 인사들을 내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경쟁자들을 향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처의 대신으로 임명하면서 본인에 대한 견제 동력을 약화시켰음.
 - 정치의 중심축을 자민당에서 정부로 전환하고, 당내 주요 책임자도 아베 측근인사를 발탁
- 경제정책에서는 일단 엔저 유도로 경기가 다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도가 높아졌음.
 - 2014년 소비세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금년 4월의 경기가 좋

아야 함.(소비세 인상 결정은 금년의 경기 추이를 보고 결정하기로 한 바 있으며, 금년 7월경에 결정하게 될 것임)

- 현재의 관료들도 지난 아베총리 1기 때 지지자들을 주요 요직으로 발탁하면서 관료들의 아베총리에 대한 충성도도 높은 편임.

○ 한·일 관계

- 아베총리가 당초 동아시아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음.
- 총리가 된 이후에는 이러한 태도를 다소 자제하고 있으며, 한일관계에서도 급격한 악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임.
 - 이는 먼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아베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아베총리도 더 이상의 문제가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영토문제에 대하여 강경한 발언을 하는 당내 유력인사들도 내각의 관련이 없는 부처의 대신으로 임명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를 약화시켰음.

○ 헌법개정 문제

- 헌법 개정의 핵심은 자위대를 국방부로 변경 등임.
- 헌법 개정은 전 의원 2/3 이상의 발의로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사실상 매우 힘든 상황임.
-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 요건에 대한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즉, 전의원 3/2 이상의 발의를 과반수의 발의로 변경하는 것임.
- 현재 공명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유신회가 약진을 하게 될 경우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합으로 과반수 획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아베정권의 지속 가능성

-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권 지속 가능성 있으며, 특히 7월의 참의원 선거 이후에는 3년 이내에 주요 선거일정이 없음.
- 다만, 경제정책이 실패하거나, 당내 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회 해산이 없이도 당내에서 총리를 교체할 가능성은 있음.
- 경제문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국채가격이 떨어지면서 지방은행들의 기반이 약해지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가 됨.

○ 일본의 TPP 참여

- 지난 자민당 정권에 비해 이번 자민당 정권의 의원 지역구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TPP 참여의 가능성이 더 커짐.
- TPP 참여의 주요 걸림돌 중의 하나가 농촌문제인데, 과거에 비해 농촌문제가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 자민당의 이번 대승에는 주로 도시지역 지역구에서 승리하면서 가장 큰 이익단체인 농협의 반대를 극복하고 TPP 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 자민당은 더 이상 농촌정당이 아님.

(3) 동경대학 방문 면담(Shin Arita 교수 주제발표)

□ 주제발표(제목: 일본의 사회) 주요 내용

○ 일본의 격차사회 현황(소득 격차)과 분석

- 1990년대 중반까지 1억 총중류사회라는 중류의식이 강하였음. 1960년대 및 70년대 경기 호황기에 소득격차 축소로 사회적 경제 불균

형이 문제가 되지 않았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게 되었음.
 - 당시 지니계수의 불평등이 미국보다 크다는 보고서 등 경제적 차에 대한 저서가 많아졌음.

- 이에 대해 동경대학에서 패널조사를 해 본 결과 소득격차에 대한 실태와 의식의 변화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
 - 당시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의식은 높아졌으나, 실제 실태는 변동이 크지 않았음.
 - 그 이유로는 일부 언론의 과잉대응이 소득격차에 대한 의식을 높인 것으로 판단함. 언론의 key word로 소득격차에 대한 빈도수가 많았던 해에는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으며, 이후 실제의 소득격차 정도는 변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빈도수가 낮아지면서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의식이 낮아졌음.

- 격차에 대한 의식이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는 있음.
 -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대중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이는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의식으로 연결되었을 수 있음.

- 일본의 생활보장제도는 기업의 종신고용, 연공적 임금, 복지후생제도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장기간의 경기불황으로 변화하고 있음.
 - 기업의 생활보장제도에 제외되는 비정규직의 급증, 남성 생계부양자의 실직 등이 나타나고, 기업들도 단기적 이익에 초점을 둔 주주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사원에 대한 생활보장기능도 약화되었음.

○ 대응방향

- 기업대신에 정부가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일본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 확대에 대한 기대 수준이나 믿음이 낮은 편임.
- 소비세 인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한다면 찬성할 수 있으나, 재정적자 등을 고려할 경우 힘들 것임.
- 대안으로 본인은 지역사회(커뮤니티 단위)에서 사회보장을 하는 bottom up 형식의 사회보장제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전통적으로 일본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디자인하는 top-down 형식의 정책 기획 및 실행은 별로 없었음.
- 상대적으로 한국은 사회보장시스템을 중앙정부에서 종합기획하여 실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일본의 많은 사회학자가 이를 연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본인은 일본의 사회적 전통이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존하기 보다는 친한 타인에 의한 보장이 익숙한 사회라는 점에서 이를 기반한 커뮤니티 단위의 사회보장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있음.

(4) Yuiko Fukagawa 와세다대 교수 발표 및 인터뷰

□ 주제발표(제목: 일본의 무역정책: TPP, RCEP and Beyond) 주요 내용

○ EPA, FTA의 환경변화

- 양자 협상의 한계가 드러나고 다자간 협상(TPP, RCEP) 접근방식이 부상
- FTA에 대한 국내 반발 극복에서도 양자협상에서는 반발이 매우 심하고 극복하기가 힘들으나, 다자협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극복하기 쉬움.
- 관세가 이미 매우 낮아진 상황에서 관세보다는 룰 협상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임. 예를 들면 전기전자제품은 이미 관세율이 거의 0%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슈는 표준화 협력 전략 등이 될 것임.

○ 한중일 FTA

- 한국의 관료들은 허브, 스포크 시스템의 FTA 선호하며, 한국이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
- 반면, 일본은 네트워크형 FTA를 선호하며, 원산지규정, 무역장벽 등에 관심
- 한중일 FTA와 관련하여 일본은 한국과의 FTA를 빨리 추진하고자 하나, 한국은 중국과의 FTA에 더욱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최근 지식경제부가 통상기능을 가지고 오게 됨에 따라 한일 FTA 체결에는 다소 유리해 질 것으로 판단함.
 - 과거 외교부에서 FTA를 추진하면서 외교관이 정치적 입장에서

FTA를 협상하는 것에 비해 향후 지식경제부에서 산업전문가가 FTA를 협상할 경우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TPP의 중요성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협상으로 새로운 룰 제정이 핵심 사항
 - 국가 자본주의에 대항한 전략적 접근 방식으로 희소자원에 대한 정부 개입, 기술이전 압력, 경쟁정책 등에 대한 새로운 룰 제정
 - FTA가 관세 및 무역장벽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TPP는 경쟁정책의 새로운 룰 제정이라는 점에서 차이

- 일본은 농업부문에서 소고기, 쌀 등의 문제 해결, 우정사업(보험, 금융) 문제 등이 문제가 될 것임.
 - 최근 일본에서는 TPP 참여와 관련하여 농업부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소고기 문제는 양보할 수 있을 것이며, 쌀 문제도 아베총리의 미국방문으로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설탕이 다소 문제가 됨. 야채와 과일은 이미 관세가 낮아 별 문제 없음.
 - 다만, 우정사업과 관련하여 미국의 Fedex와 같은 업무의 자유화 문제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일본에서는 좌파 성격, 우파 성격 기업 모두가 TPP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

- 다만, 농업, 의료, 제약업(임상서비스), 원전반대론자(반성장주의자,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민주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론자, 반미주의자, 일본이 신의 국가라는 신봉자 등이 반대하고 있으나, 소수일 것으로 생각

○ 일본의 FTA 경제적 효과

- 효과의 크기 순으로는 FTAAP > 일중FTA > TPP > 일EU FTA 순으로 추정

○ TPP와 한미FTA의 비교

- 전략적 관심에서는 한국이 관세, 수출 진흥, 무역 균형에 초점을 둔다면, 일본은 투자자 보호, 소득균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한국은 FTA에 관심을 두고 일본은 EPA(BIT+서비스 협정)에 관심
- 접근방식에서는 한국의 FTA의 허브 효과를 가지기 위해 양자간 협상에 초점을 둔 반면, 일본은 EPA를 통한 다자간 협상에 초점
- 협상 스타일에서는 한국이 빠른 협상타결과 느린 비준인 반면, 일본은 느린 협상타결과 원만한 비준률 도모

(5) 아지모토 기업 방문 면담(Masaya Tochio 집행역 및 경영기획부장 주제발표, Yutaka Kagaya 이사, Jin Horio 경영기획부 전임부장)

□ 주제발표(제목: 아지모토 기업의 성장전략) 주요 내용

○ 아지모토 기업 현황과 연혁

- 1909년 설립, 고용 2만 8,000명(해외 1만명), 1조 2천억엔 매출, 도쿄 대학 이께다 교수 아미노산 특허를 기업가와 합작으로 기업 설립 그루타민산 상품(세계 최초) 생산
- 비전: 맛있는 것과 몸에 좋은 제품 생산 공급하고 왜소한 일본인의 건강 증진 도모
- 매출은 일본 37%이며, 식품에서 이익 43% 점유

- 한국과의 관계는 아지노모토 코리아를 설립(조인트투자 회사) 1968년 50명 320억원 매출, 농심이 총 판매업체
- 2013년 한국에서 생산회사 설립 예정(인천 바이오 공업특구 11000평 방미터)

○ 강점과 약점

- 강점: 세계 넘버 1 아미노산 관련 업체로 과학적으로 맛을 분석하고 기술개발
- 약점: 글로벌 기업이라지만 국내에 주요 기반이 있으며, 성장속도가 빠르지 못함.

○ 성장 목표 및 전략

- 성장계획 : 2020년 글로벌 탑 10 포함 목표,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
- 성장전략 : 기업의 글로벌화 도모
 - 글로벌 성장: 현지화, 로칼 세일즈 네트워크, 첨단기술을 현지생산기술로, 원자재 현지 조달
 - R&D 투자 확대 :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개발

○ 경영체제

- 1990년대까지는 창업자 가문에서 직접 경영하였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문제화 되면서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

○ 기술개발

- 기초 R&D 와 응용 R&D 모두 기업자체로 추진하고 있으나, 바이오 의약 등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 받음.

○ 해외 유통 전략

- 진출할 국가에 따라서 판매 도달률을 따라 다름. 미국과 같이 큰 대형마트가 지배적인 나라가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 태국은 작은 상점이 지배적임.
- 소형 상점이 시장지배적인 나라에서는 비효율적이라도 본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마케팅 관리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광고보다 더 도달률이 높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 한국과의 협력

- 한국의 소비자가 일본 음식에 유연하다는 점은 장점이나, 식품규제가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원칙이 자주 변화)
- 인천에 새로운 공장 설립 이유는 한국 정부가 인천에 바이오 산업 특구 설치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전기료 싸며, 우수한 바이오 회사, 연구원, 인력이 존재하며, 한국은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한국에 공장이 있는 것이 유럽과 미국과의 대형회사와의 경쟁에 유리

(6) 경제산업성 방문 면담(Takeo Ijuin 통상정책국 한국실장, Yuji Ida 대신관방참사관)

□ 주제발표(제목: 일본의 통상정책) 주요 내용

○ 통상정책의 주요 변화

- 최근 TPP가 일본 통상정책의 큰 부분이며, 아베총리의 방미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농업부문에 대한 대처도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
- 지금까지 일본의 통상정책은 경기침체 탈피와 경기부양을 위한 통상정책이 추진되어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협상에 초점
- 3-4년 전부터는 통상정책이 점에서 면으로 전환되었음.
 - 일본의 생산체제가 냉장고의 예를 들면, 문은 베트남, 내부는 인도네시아 생산과 같이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점과 점을 연결해야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임.
- APEC, WTO(환경적)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일본은 점과 면을 연결하는 FTA 정책을 통해 내수확대에서 외수확대로 전환하는데 중점
- 관세는 충분히 낮기 때문에 제도정비, 룰의 정비에 관심

○ 일본의 비관세장벽

- 일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한국의 불만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본은 OPEN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불만 제기 사항은 민간의 상거래 관행 문제 등에 기인함.

○ 우정성문제와 TPP

- 우정성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농업문제가 더욱 문제

○ 한일 FTA와 TPP

- 한일 FTA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외교부 보다는 지식경제부에서 통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음.
- 과거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지식경제부와 일본 경제통상성의 관계가 좋았으나, 이후 관계가 멀어짐. 향후 관계 개선 기대
- 현재 일본의 가장 관심사는 TPP임.

□ 주제발표(제목: 일본의 산업정책) 주요 내용

○ 아베총리의 주요 경제정책

- 경기부양을 위한 3개의 화살 중 국회 통과 10조엔 예산, 금융정책 등 2개는 이미 실행하고 있으며, 성장전략(산업경쟁력회의; 총리, 아소부총재, 규제완화대신, 과기대신 등 6명 각료와 10명 학자 참여)은 5-6월에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어 실시될 예정

○ 성장정책

- 지난 민주당 정부는 분배에 초점을 두었으나, 현 아베정부는 성장에 초점을 둬.
- 성장정책의 걸림돌인 6중고(세제, 엔화강세, 환경규제, 노동규제, 에너지, 연금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핵심 내용임.

- 일본기업이 일본내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 진출하는데 따른 국내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 마련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비해 일본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비세 문제로 인해 법인세를 인하하기 힘든 상황임. 다만,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는 CO2 배출 규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현 자민당 정부에서는 성장을 위해 재검토할 예정
- 또한 민주당 정부에서는 원전 0 방침이었으나 현 자민당 정부는 재검토할 계획임.
- 중장기적으로 성장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이노베이션을 촉진할 계획이며, 이는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연구개발비가 감소된 것과 비교됨.
- 일본의 문제는 산업의 신진대사(산업재편)가 잘 안되는 문제가 있음.
 - 독일의 경우 3년 연속 적자가 되면 심사를 통해 퇴출을 하는데 비해 일본은 금융수혈로 계속 연명하면서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일본도 기업가들이 조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지난 3년간 고용의 이동이 쉽도록 정부가 고용 유지 보조금 정책 등을 변화).
- 벤처 캐피탈을 통한 벤처 비즈니스 지원
- 해외시장 진출 확대 노력: 국내시장 향유로 해외 진출 유인이 약화되었으나, 향후 고령화를 감안할 경우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함.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 통상정책 활성화, 일본으

로의 외자 유치 등을 추진

- 산업경쟁력회의 민간위원들은 인재의 글로벌화 중요성을 제기
- 성장정책 추진을 위해 재무성과의 협력이 중요하나,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정책을 시도

○ 일본의 R&D 정책

- 일본 전체 R&D 규모에 비해 정부 R&D 예산은 매우 적으며, 민간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조치를 하고 있음.
- 대학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학의 연구개발 방향을 정부가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는 바이오, 에너지 등 4개 분야를 지정하여 대학 R&D 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지원

○ 고용정책

- 고용문제가 심각하며 학생은 대기업을 선호하여 중소기업 고용이 중요함.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97%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3월까지 경영개선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벤처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수천억엔을 출자 지원할 계획임. 또한 시제품 생산 지원, 체질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
- 고용문제는 기업의 신진대사와 연계되어 있으며, 고용유지 정책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기업 보다는 근로자가 이동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일본에서는 고용 안정을 저해하는 정책은 시행하기 힘든 상황임.
- 여성고용정책에 대해서는 일본은 여성고용이 M자 커브를 지니고 있어 육아문제가 여성고용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육아시설 지원책

마련

○ 장기적인 성장정책

- 산업경쟁력회의(장관 6명, 민간위원 10명)의 가장 큰 핵심은 규제완화임.
- 일본은 고이즈미정부부터 '관에서 민으로'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최근까지 산업계의 의견 무시하고 정부가 관료에 의한 정책 수립은 하지 않았음.
- 전략시장을 창조하고, 신성장산업 4개 분야(건강수명, 그린산업, 차세대 인프라, 농업·관광 및 지역진흥)을 성장산업화 필요
- 신성장산업의 성장전략은 성장부문을 선정하면 이 분야에서 공급자가 나와야 됨. 따라서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수요를 일정부분 기업에 대해 보장하고 약속함으로써 공급자를 유도
-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신뢰성이 필요하며, 정권의 안정 또는 연속성이 필요함.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문제

-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산업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일본은 대기업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성공하려면 방해 또는 인수합병을 시도함.

(7) 재무성 방문 면담(Yoshiyuki Komiya 주계국 조사과장, Koji Jinzu 주계국 조사과 과장보좌)

□ 주제발표(제목: 일본의 재정정책 및 재정건전화 문제) 주요 내용

○ 일본 재정적자 현황

- 1975년 이후 재정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재정건전화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으로는 1989년과 90년의 적자국채 발행, 거품경제의 붕괴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악어의 입 그래프)
- 2002년 고이즈미 정부부터 리만사태 이전까지 사회복지 지출을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다시 기울였으나, 그 이후 다시 확대됨.
 - 또한, 금리 인하로 이자지출이 2006년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금리 인하 효과 초과해서 이자지출 다시 증가

○ 고령화와 재정적자

- 국채와 사회보장비 늘어나면서 지방교부금, 미래에 대한 투자 등의 예산 비중은 낮아지면서 세대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현재 현역 2.4명이 고령화 1명을 부양하는 시스템이 2050년 1명이 1.2명을 부양하여야 됨.
 - 따라서 고령자가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한국도 고령화의 속도가 일본과 비슷하게 진행되면서 일본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보험(연금) 문제, 공정성 문제, 세출 삭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이를 준비해야 함.

○ 소비세 인상

- 법 개정을 통해 소비세율이 금년 8월 8%, 내후년 10%로 인상하기로 결정된 바 있으나, 경기동향을 판단하여 실시여부를 확정하기로 되어 있음.
- 과거 소비세 인상을 주도하였던 모든 정부가 무너졌으며, 언론도 소비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많아서 재검토 후 실시하도록 결정된 바 있음.
- 금년 8월의 인상 여부는 경기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 한 올릴 것으로 예상됨.

○ 대지진과 재정적자

- 대지진 당초 19조엔 예산 편성하였으며, 17조엔이 기 집행되었음.
- 이후 6조엔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수입은 6-7조엔의 우정사업 주식 처분하여 4조엔 매각 이익과 2조엔의 내년도 결산잉여금으로 총 6억원의 예산을 확보
- 이에 따라 지진 복구에 총 25조엔이 투입되게 됨.
- 대지진 복구사업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었음.
- 국가공무원의 봉급을 7.8% 삭감함과 아울러 지방 공무원 봉급 삭감도 유도하였음.
- 지방 공무원 봉급 삭감 요구에 대한 지역의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봉급 삭감을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을 삭감

○ 원자로 폐로와 재정적자

- 원자로를 폐로할 경우 상상하기 힘든 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 저축률 하락과 재정적자 문제

- 고령화로 인해 가계 저축률이 하락할 경우 일본내 자금으로 일본 재정적자에 따른 국채를 소화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8) Fukushima Nukaga 중의원 의원(자민당) 면담

Fukushima Nukaga 중의원 의원 약력

- 모리정부의 경제재무성 대신
- 자민당 정책위원회 의장
- 오부치, 고이즈미 정부의 방위성 대신
- 아베, 후투다정부의 재무성 대신

발언 주요 내용

○ 의원 경력

- 본인은 의원 경력 30년 중 25년을 한일의원협의회 의원으로 역할

○ 일본 경제

-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등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추진
- GDP의 200%가 넘는 국가채무와 관련 재정건전화의 필요하며, 소비세 인상의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
- 금융완화, 성장, 사회보장의 내실화 정책이 본격화되었으며, 주가가

상승하고 있음.

- 재정지출을 통한 공공투자를 증가시켜 이를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함으로써 성장에 기여

○ 외교 및 안보

- 북한문제가 심각, 과거 미국의 클린턴정부나 부시정부는 북한에 속은 것으로 생각
 - 경제적 제재는 한계가 있으며, 6자회담에서도 북한에 이용당한 것으로 판단
- 북한 핵실험의 추가 제재조치에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의 궤도 수정에 중국에 좌우됨.
- 한·미·일이 연계하여 북한에 대항해야 하며,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필요함.
 - 중국도 협조하지 않으면 국제적 비난이 있을 것이며, 북한은 아시아의 이란으로 생각

○ 한일관계

- 한일관계에서는 일본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전환되는 이 기회를 살려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 한일 정치인들이 국내 정치적 목적에 한일관계를 이용할 경우 관계가 저해될 수 있음.
- 1998년 김대중전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한일관계에 대해서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전개하자'는 기본 방향이 한일관계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

○ 한반도 평화협정

- 한반도 평화협정은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핵 개발 억제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틀의 정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북한과의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계속 속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곤란함.

(9) 미쯔비시-동경 UFJ은행 방문 면담(Masato Miyachi 아시아본부 집행역 주제발표, Hiroshi Tamai 홍보부장)

□ 주제발표(제목: 은행의 아시아 성장전략) 주요 내용

※ 발표자료는 발표후에 회수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기 곤란

○ 은행의 해외부문 비중

- 2000년대 중반 이후 은행의 해외부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아시아 각국의 경제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각 국에 적합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
 - 아시아는 가격보다는 감정에 따라 사업 결정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응한 전략 마련이 필요

○ 아시아 진출과 일본의 ODA 연계

- 일본 ODA 무상지원과 연계하여 민관이 입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

○ 일본 국채 매입

- 일본 국채를 약 40-45조엔 보유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국채가 매우 유용한 자산으로 판단하고 있음.

○ 중국 금융규제에 대한 대응

- 중국의 금융규제는 매우 엄격함.
- 외국은행이 중국은행과의 경쟁이 매우 곤란함. 다만, 당 은행은 과거에 중국의 요청대로 1000억엔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한 이후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영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음.
- 중국에서의 영업에는 국제적인 룰을 강조하기 보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고 문제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함.
- 구미의 은행들은 시스템이 매우 강하며, 시스템 부분서는 일본 은행이 경쟁이 되기 힘들.
- 다만, 중국내에서의 경쟁에서는 시스템의 강점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은행들이 경쟁이 가능함.

(10) Shuhei Kishimoto 중의원(민주당) 의원 면담

Shuhei Kishimoto 중의원 의원 약력

- 민주당 재선 의원
- 경제통상산업위원회 위원
- 예산위원회 위원

□ 발언 주요 내용

○ 본인의 경력

- 재무성에서 23년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서 경단련 회장 자문역을 역임하고 의회에 진출하여 재선됨.
- 관료 생활 중 낙하산 체제와 관료의 문제, 기득권 문제 등에 따라 정책이 왜곡되는 현상을 타파하고 개혁을 위해 관료를 청산하고 개혁을 주창한 민주당에서 의회에 진출

○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

- 민주당이 인재 등 정권 운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음.
- 민주당에 대한 분노, 경시, 혐오가 이번 선거운동시 느껴졌음.

○ 향후 민주당의 재집권 전망

- 향후 10년이내에 재집권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임.

○ 소비세와 TPP에 대한 견해

- 본인은 TPP와 소비세 인상에 모두 찬성함.
- 민주당내에서 소비세와 TPP를 반대한 모두 민주당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였음.

○ 향후 일본 정치 전망

- 일본 유신회가 도약할 것임. 도쿄 도의회 선거 이후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선거에서 일본 유신회가 도약할 것임.

- 일본 유신회와 이시하라 도쿄지사간의 협력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크게 약진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일본 유신회와 이시하라지사간의 협력은 일정부분 정책 공유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책적 차이가 많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 이후 분열될 것으로 판단함.

○ 자민당의 정책 방향

- 지난 60년간 일본의 정권을 이끌어 온 자민당은 과거 자민당내에 보수와 진보그룹(liberal 보수 group)이 공존해 있었기 때문에 정책 운용이 어느 정도 균형 잡혀져 있었음.
- 그러나 자민당내의 진보그룹이 탈당하여 민주당을 창당한 이후에는 자민당내 진보그룹의 정책을 추진할 세력이 없어서 사실상 통로가 막혀져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자민당의 우경화 정책에 대한 제어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함.

○ 민주당과 자민당 정책 차이

- 민주당이 분배, 자민당이 성장 지향적이라고 관료나 언론이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임.
- 민주당은 소득격차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빈곤 해결이라고 판단하였음.
- 빈곤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사회보장제도를 분배 지향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임.
- 자민당 정권에서 생활보장수준이 낮아져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것은 문제임.

- 민주당도 3년 추경을 하였으며, 다만,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두고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았음.

○ 아베노믹스의 문제

- 아베노믹스가 대담한 금융완화,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음.
- 아베노믹스의 금융정책은 기본적으로 출구전략이 어려움. 물가 2%를 타겟으로 하나, 금리 상승이 있을 경우 국채시장이 불안해지고 헤지펀드 등의 움직임으로 금융불안 야기 가능성
 - 엔화약세가 국채시장의 불안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
 - 금융불안이 야기될 경우의 출구전략이 없음.
- 재정정책은 재정지출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국채 발행이 늘어나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
 - 공공투자 확대가 생산성 증가로 연결되지 못함.
- 성장전략은 규제개혁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 자민당 아베정권의 규제개혁담당 대신이 여성 변호사 출신으로 당내기반이 약해 정책 추진력이 약할 것으로 우려됨

(11) Shunsuke Managi 동북대학대학원 환경과학연구과교수 주제발표 및 면담(장소: 경단련)

주제발표(제목: 일본의 에너지 정책) 주요 내용

○ 향후 유가 전망

- 석유매장량에 대해서 지리학자의 견해가 계속 수정하고, 현 단계에서는 매장량의 한계를 추정하기가 힘든 상황임.

- 유가는 중국성장으로 수요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당초에는 유가 상승시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했음.
- 그러나 이후 크게 상승하였으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음.
- 유가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의 원전 문제

- 원전은 온실가스 완화에는 도움이 되나, 원전사고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 일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고 부족분은 참으면서 견디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 정당별로는 민주당의 경우 원전 폐쇄, 자민당은 원전 유지 쪽으로 가고 있음.
- 향후 자민당 정부에서는 원전의 신축은 매우 어려울 것이나, 기존의 원전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

○ 신재생에너지

- 일본에서는 대형 수력발전은 힘든 상황이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온천을 이용한 발전임.
 - 온천을 이용한 발전은 개발론자는 환경 등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나, 반대의견도 많이 있으며, 특히 근처 주민들의 반대가 높음.
- 풍력은 태양광 보다 저렴하나, 일본의 지형상 바람이 일정하게 불지

않아 발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바다의 풍력발전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음.

○ 일본의 에너지정책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수요측(소비자) 지원에 초점
- 한정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음.

(12) 후지중공업 방문 면담(Hirofumi Soejima 홍보부장 발표, Masashi Uemura 투자관계 매니저)

□ 주제발표(제목: 후지중공업의 성장전략전략) 주요 내용

○ 후지중공업의 연혁

- 1917년 비행기 생산업체에서 1945년 자동차를 생산하는 후지산업, 1953년 후지중공업으로 전환하고, 1958년 경차를 생산

○ 후지중공업의 제휴관계

- 1987년 미국과의 조인트 벤처를 한 이후 1999년 GM과의 전략적 제휴를 하였음.
- 이후 2005년 GM과의 전략적 제휴를 해지하고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음.
- OEM으로 일본 도요차 자동차를 후지중공업에서 생산하고 있음.

○ 후지중공업 자동차의 기술적 수준

- 후지 중공업에서 생산하는 Boxer형 엔진은 기존 엔진에 비해 중심이 낮아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동차의 균형 레이아웃을 하는데 장점
- 연비를 20-30% 향상시켰으며, 다양한 안전장치 개발을 하고 있으며, 안전장치(eye-sight)에 인기가 높음.

○ 중국진출

- 후지중공업에서 중국 진출을 위해 과거 몇 년간 상당히 준비를 하였으나, 최근 일중관계의 악화로 인해 인허가를 받지 못해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기경영계획

- 글로벌 브랜드의 위상을 확립할 계획
- 대량생산의 효과가 있는 경차부문은 후지중공업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동안 생산해 온 경차부문을 중단
-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자동차 개발에 역점

(13) 게오대학 Yoshihide Soeya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발표 및 인터뷰

주제발표(제목: 일본의 외교정책) 주요 내용

○ 요시다 노선의 형성

- 일본 외교정책은 일본 헌법구조와 미일안보조약 2개의 틀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시다노선이 기본 골격임.

- 종전이후 미국 주도하에 만들어진 현재의 일본 헌법은 현재까지 한 구절도 바꾸지 않고 있음.
- 전쟁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일본 헌법은 무력사용을 금지하는것임.
- 이후 냉전과 중국의 부상에 따라 만들어진 미일안보조약은 안보에 대한 미국 의존을 바탕으로 됨.
-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이 공격받았을 경우 미국이 개입하는 내용이 골격이며, 반대로 미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일본은 개입하지 않음.
- 이유는 일본은 헌법에 의해 해외에서의 무력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임.
- 종전이후에는 미일안보조약이 아니라 유엔에 의한 안보가 중심이었으나, 냉전시절 중국 국민당 쇠퇴, 한국전쟁 등 상황변화가 발생하면서 유엔의 기능이 약화되자 동아시아의 안보는 미국이 맡는대로 방향으로 변화(미일 안보 중시)되면서 미일안보조약이 핵심 역할

○ 요시다 노선의 변경 논란

-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반대 : 사민당, 공산당이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헌법 개정을 주장

○ 헌법 개정 논란

- 처음 헌법 개정 논란은 1950년대에 제기되었음.
- 사민당과 공산당에서는 미일안보조약 폐기에 바탕을 둔 헌법 개정을 주장
- 자민당에서는 미일안보조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주장
- 이후 헌법의 비무장(무력 사용 금지)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아직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음.

○ 헌법의 비무장(무력 사용 금지)에 대한 개정 논의

- 냉전의 종식(버블경제의 붕괴), 외교환경 변화, 9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 등으로 비무장 중립론은 약화
- 1990년대는 전형적인 포스트 냉전 질서 나타나면서 동유럽 문제, 이라크 문제 등 비전통적인 안전보장이 대두된 시기로 전통적인 주권 국가 중심의 안정보장 보다는 다자간 안전보장이 중시되는 경향
- 호소와가 정부시절에 미일안보와 다자간안보 문제가 논의되면서 미일안보 보다 다자간 안보를 중시하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제기되자 미국이 불안해 하면서 오히려 미일 안전보장을 재확인하게 되었음.
- 유엔 PKO 참여(다자간 안보 참여)는 자위범위 넘어서 집단적 자위권이 있는 가하는 논의로 연결되고 결국 의회에서 투표가 가결되어 1990년대에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자위대 파병
 - 캄보디아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는 여타 파견 국가 군대와는 달리 무력사용을 금지
-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헌법개정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아직 헌법개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본의 보통국가론

- 헌법의 제약을 점차 없애고, 보통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는 헌법 개정 논의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터부시가 되었던 헌법개정 논의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지고 활발해짐.
- 유엔 PKO 참여도 제대로 못한 것이 문제라는 인식도 있으며, 현재 여론조사 결과 개헌에 대한 찬성은 5:5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내용은 자위의기준을 명확히 하면, 국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 동아시아 문제

- 1994년 북한 핵문제, 대만해협 긴장이 같이 시기에 나타난 것이 미일 동맹에 불행
 - 북핵문제로 미국과 일본이 극동 유사시에 군사협력을 할 것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중국은 대만해협 문제로 미일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하게 반발

- 최근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는 중국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함.
 - 당초 일본은 1970년대에 기존 국제질서에 중국을 편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고 등소평의 개혁 개방 흐름을 강력하게 지원
 - 당시 등소평의 요청에 따라 미쯔시다가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중국이 일본 ODA의 최대 수혜국이 되었음.
 - 지난해 중국내 마쯔시다 공장이 반일 데모로 파괴되었음.

-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서양 강국의 진출로 굴욕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에 진출한 서양 강국보다 일본을 더욱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중국은 대국으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중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시아의 옛날 질서이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 당연하고, 중국과 일본의 국경 분쟁에서도 샌프란시스코 회담 내용과 결과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

- 중국의 민족주의 경향 강화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문제로서 한 나라만 대응할 수 없으며, 한미일 협력이 필요함.

(14) 출장자들의 일본 경단련 주체 심포지움 발표 내용

- 장소: 일본 경단련 국제회의실
- 사회: Yuiko Fukagawa 와세다대 교수
- 참석자: 일본 경단련 회원사 관계자 150명
- 주제발표자 및 발표제목
 - Korean Economy in the Global Economy and its Challenges(LG 경제연구소 이지평박사)
 - The Korea's FTA Policy and Korean Agriculture(KIEP 서진교박사)
 - The Success Stories of Korean Corporations and their Future(삼성 경제연구소 이용화박사)
 - Key Medium and Long Term Policies Necessary for Korean Economy(KDI 송영관박사)
 - The Deepening Worry of Korean Economy and its Policy Implications(한국경제연구원 허원제박사)
 - Domestic Regional Industrial Policy & Employment in Korea(KIET 최윤기박사)